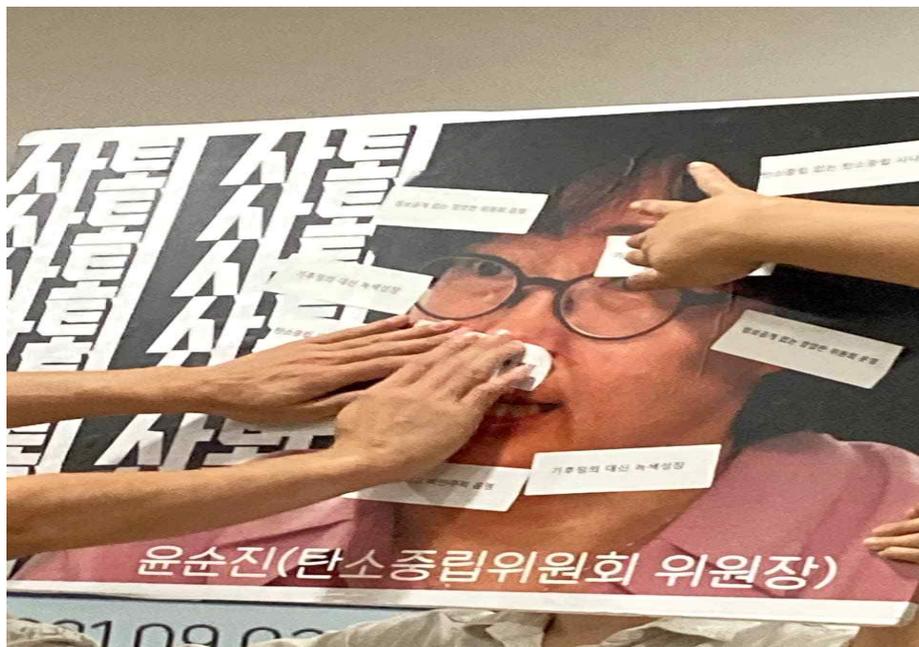


## [사후보도자료]

탄소중립위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 출범 및  
탄소중립위 시민사회 위원 사퇴 요구 공개질의 기자회견









**발신** | 탄소중립위원회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수신** | 귀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담당

**장소** | 센터포인트 광화문 지하 1층(세종문화회관 뒷편)

**일시** | 2021년 9월 2일(목) 오전 11시

**문의** | 한재각 010-2813-8706

#### 참여단체

(사)푸른아시아 / 가디언즈 오브 클라이밋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공공교통네트워크 /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 공동체도꼬마리 / 기후정의포럼 / 기후위기 전북비상행동 /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 너머서울 기후위기서울모임 / 녹색정치Lab 그레 / 다산인권센터 / 동물해방물결 / 동물해방풀뿌리네트워크 직접행동DxE / 멸종반란한국 / 멸종저항서울 / 빈곤사회연대 / 사회변혁노동자당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SHARE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 에너지정의행동 / 예술행동 한뼘 / 음성노동인권센터 / 음성민중연대 / 이윤보다인간을 / 이후연구소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운동공간 활 /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철도노동조합 / 전북녹색연합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환 / 청소년기후행동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체제전환을 위한 청년시국회의 / 프리데코 / 플랫폼c / 한국YMCA전국연맹 / 홈리스행동 (총 46개 단체)

1. 귀 언론사에 평화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9월 2일 오전 11시, 탄소중립위원회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탄중위해체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개질의와 사퇴촉구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탄중위해체공대위는 탄소중립위가 입주한 콘코디언 빌딩을 찾아,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였다.

3. 탄중위해체공대위는 정부의 허구적인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을 저지하기 위한 9월과 10월에 한시적으로 활동할 예정인 연대기구다. 현재 46개 단체와 60명의 활동가/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4. 기자회견의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박정숙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는 “알 수 없는 이상 기온에 비가 쏟아지면 집에 물이 새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삶, 폭염 속에 에어컨을 켜는 것조차 두려워 시간을 재가며 전원 버튼을 눌러가야 하는 열대야의 밤, 거리두기의 실현이 불가능한 쪽방촌의 공간”을 언급하며,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업의 앓는 소리를 담는 것이 아닌, 이 사회가 배재시킨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한다고 강조했다.

5.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김정주 발전노조 중부발전본부장은 지난해 말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지된 후 280여 명의 노동자가 전환 배치되고, 협력업체 직원 16명이 실직했다고 말했다. 2025년부터 3만명 정도 되는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전국의 30개 가까운 발전소가 일제히 폐지되는 것이 예견되는 가운데,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탄중위에 노동계를 대표해 한국노총 위원장 한 명만 들어가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실상 탄중위는 기후위기 최전선의 민중의 참여를 배제하며 산업/기업이 주도하며, ‘탄소중립시민회의’라는 형식을 동원해 사회적 승인을 얻으려고 하는 비민주적인 기구라고 규탄했다.
6. 마지막으로 인권운동사랑방 정록 상임활동가는 탄소중립위원회해체공대위 출범이유를 밝히며 “탄중위 해체의 대안은 탄중위가 멈췄을 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도높게 탄소중립위를 비판하며 앞으로 두 달 동안 탄중위에 정당성이 없다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선포했다.
7. 발언을 마치고, 서린 사회변혁노동자당 활동가와 김선철 멸종반란한국 활동가는 16명의 탄소중립위원회 시민사회 위원들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이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낭독하였다.
8. 낭독 후 탄중위가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와 윤순진 위원장 및 시민사회 위원들이 탄중위를 사퇴해야 하는 이유를 담은 스티커를 윤순진 위원장 사진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9. 기자회견을 마치고, 탄중위해체공대위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입주한 광화문 콘코디언 빌딩을 찾아, 건물 관리 직원 및 경찰과 한 시간가량 실랑이를 벌인 끝에 탄소중립위원회 운영지원과 과장에게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였다.
10. 많은 후속 취재 바랍니다. (끝)

[첨부1] 기자회견 순서

[첨부2] 탄중위해체공대위 제안서

[첨부3] 탄소중립위 시민사회 위원 사퇴 요구 공개서한

## [첨부 1] 기자회견 순서

- 사회: 한재각 (기후정의포럼 활동가)
  
- 발언(1): 김정주 (발전노조 중부발전본부장)
- 발언(2): 박정숙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 발언(3):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공개질의서 소개: 서린 (사회변혁노동자당 활동가), 김선철 (멸종반란한국 활동가)
- 질의응답
- 탄소중립위원회 시민사회위원 사퇴 촉구 퍼포먼스
- 공개질의서 탄소중립위 사무실 전달

## [첨부2]탄소중립해체공대위 제안서

‘탄소중립위원회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제안합니다

### 제안이 시작되는 자리

2021년 8월은 한국 기후운동에서 중요한 시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산업계로 대표되는 권력집단이 바라보는 ‘기후위기의 책임(원인)과 해법’이 가시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 그것입니다. 이들은 기후위기의 원인을 화석연료라는 특정 에너지원과 시민들의 무분별한 소비문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법은 위험하고 현실성 없는 미래기술 또는 재생에너지 시장, 탄소 가격 시장 활성화가 됩니다. 기업과 자본은 기후위기의 책임을 지기는 커녕 녹색성장을 이를 주역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8월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도 발표되었습니다. 현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높아지는 시점을 기존보다 10년 이상 앞당긴 2040년 즈음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붕괴가 시작되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확인했습니다.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해도 1.5도 이상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종말론적 결론에 많은 이들이 좌절했습니다.

녹색기술과 시장에 대한 근거없는 낙관으로 가득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과 과학적 분석과 추론에 따라 암울한 결론을 내린 IPCC 보고서는 상반돼 보이지만 동일한 정치적 입장에서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바꿀 수 없는 자연질서라는 것입니다. 지구 생태계의 붕괴, 인간세계의 종말은 가깝게 느껴지지만, 이윤추적과 성장을 위해 인간과 자연을 수탈하고 착취해 온 자본주의 체제의 종말은 상상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맞서며 기후위기 속에서도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는, 결코 자본이 그어놓은 한계에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야와 운동은 자본주의 너머를 향합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외쳐야했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감축할 것이냐입니다. 정부와 자본은 자신들의 전략을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으로 공표했습니다. 녹색 자본이 성장하면 온실가스는 저절로 감축될 것이고, 어렵다면 탄소포집저장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자본과 시장과 기술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대안이라며 ‘참여와 합의’를 강요하는 저들에게 정면으로 맞선 투쟁이 이제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 탄소중립도, 기후정의도, 민주주의도 없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좌초시키기

탄소중립위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은 이제 두 달동안 ‘사회적 대화와 합의’ 과정을 거쳐 정부 정책 로드맵이 됩니다. 또한 탄소중립위는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제출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정부가 탄소중립위를 앞세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작업을 10월 말에 완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두 달 동안 탄소중립위가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프로세스를 좌초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그대로 두고, 정부와 국회에 대한 비판을 반복하는 것은 공허합니다. 정부는 탄소중립위를 내세워, 자본과 시장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전략에 대한 사회적 승인과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탄소중립도 아니고 기후정의 원칙도 상실된 시나리오 3개를 던져놓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소위 전문가들의 검토, 그리고 '탄소중립시민회의'라는 이름으로 동원된 시민 '여론조사'까지 잘 연출된 '탄소중립 민주주의 극장'이 두 달동안 열리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마저 왜곡하는 이 프로세스는 분쇄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승인이 아닌 사회적 고립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사회적 정당성이 아닌 부당함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윤순진 탄소중립위 위원장은 '탄중위가 신뢰를 잃으면 사회적 불행이라며, 탄중위를 비판한다고 일이 해결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탄소중립위를 비판한다고 기후위기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의 책임을 자본에게 묻고, 기후위기 최전선의 시민들이 사회적 필요에 따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계획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만적인 탄소중립 시나리오, 탄소중립위와의 싸움은 불가피합니다. 그렇게 탄중위가 신뢰를 잃으면 사회적 불행이 아니라 한국 기후운동의 커다란 성취이자 진전이 될 것입니다.

#### **자본과 기업에게 기후위기의 책임을! 기후위기 최전선의 시민들에게 권리를!**

탄소중립위 해체 투쟁은 자본과 시장 주도의 정부 기후위기 대응 전략에 맞선 투쟁입니다. 자본과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가 아니라 세상을 이렇게 망친 주범이라는, 기후위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투쟁입니다. 기후위기의 원인인 시장과 자본에게, 생산을 조직하고 계획할 권한을 사회에 양도하라는 권력 관계의 변화로까지 이어져야 할 투쟁입니다. '사회'는 바로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살아가는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청년과 같은 시민들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부와 자본이 '기후 취약계층'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할당하고 배려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거대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할 전환의 주체입니다.

이제 새로운 세계를 향한 투쟁을 다시 시작합니다.

'탄소중립위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대위'를 시작으로 녹색 자본주의만이 대안이라는 저들에게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낼 역량과 비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1년 8월 26일

## [첨부3] 탄소중립위 시민사회 위원 사퇴 요구 공개서한

발신

탄소중립위원회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

수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양흥모 에너지전환 해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박진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최경선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조규리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대표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

김선명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상임대표

백종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총무

안홍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 위원장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 위원님께, 탄소중립위원 사퇴를 요구합니다

지난 5월 말 탄소중립 전략을 논의하는 민관협력기구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이후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대부분의 기후운동 단체들로부터 그린워싱으로 비판받은 P4G회의를 앞두고 졸속적으로 꾸려진 탄소중립위원회의 참여자 대다수는 대기업과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인, 교수나 연구원 등 소위 전문가, 그리고 민관협력에 적극적인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기후정의운동이 기후위기 극복의 당사자이자 주체로 여기는, 기후위기 최전선에 선 민중과 공동체는 배제되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

는 노동자와 농민, 빈민, 소상공인의 자리는 없습니다. 이들을 배제하고 엘리트 중심으로 구성된 탄소중립위원회는 출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처음부터 친정부 친기업 인사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출발했고 민주적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비민주적 기구입니다.

게다가 탄소중립위원회는 투명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밀실 기구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의 논의는 철저하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 위원님은 탄소중립 위원직을 승낙 하면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쓰셨을 겁니다. 5000만 시민은 우리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계획을 누가 어떻게 짜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100명도 채 되지 않는 탄소중립위원들의 논의를 위해 두껍고 높은 장막을 치는 것입니까. 여기에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실체도 모호한 '기술작업반'에 의해 작성되었다 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사후적인 의견수렴과 탄소중립시민회의 개최는 민주적 정당성 없는 요식절차에 불과합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선 민중과 공동체들이 의제 설정을 포함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권한이 부여되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때 민주적인 토의도 가능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모든 시민들이 동감하듯,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안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모두 부적절하고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 중 두 개는 탄소중립조치 달성하지 못합니다.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그 자체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술 낙관주의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기술을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배출권거래제 같이 과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못한 시장주의 정책을 주요 감축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술과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나 낙관적 기대를 담고 있지만, 파리 기후협약에도 담겨 있는 기후정의의 정신은 담지 않았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사람과 자연을 착취하는 현 사회구조를 유지하면서 대차대조표상 온실가스 감축을 증명하려는 방식을 '창조적 회계'라며 비판했습니다. 못생명의 공존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담지 못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제안한 비민주적인 탄소중립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지금의 탄소중립위원회 체계 안에서는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를 해체하고, 민주적인 탈탄소 사회로의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고 여기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 위원들의 자진 사퇴를 요구합니다. 탄소중립위원회를 나와 새로운 대안의 구축에 함께 하시기를 요청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신다면 왜 탄소중립위원회가 필요한지, 제안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어떻게 정당한 지 설명해주십시오.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비민주적이고 거짓 해법만 제시하는 탄소중립위원회에 계속 남는 것은 한국 기후위기 대응의 역사에 크나큰 오명을 남기는 것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를 정당화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해주십시오.

어떤 분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까지 시간이 얼마 없는데 탄소중립위원회 안에서 최대한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월에 잘못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해

서 정부가 국내외에 공표하는 것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결정을 무산시키고 새로운 체계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정말 필요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 훨씬 낫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후정의 없는 시나리오가 기준이 되어 우리 미래와 기후운동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수치와 수단에 관한 몇 가지 보완 조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밀실의 탄소중립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하는 대안적인 공론장, 기후정의 공론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안 공론장은 우리의 토론을 협소하게 만들고 왜곡시키는 탄소중립위원회를 해체했을 때 가능합니다. 잘못된 결정에 둘러싸여 서는 행동을 중단하고 소수의 밀실 협상을 박차고 나와, 더 넓은 공간에서 민주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생명 공존의 탈탄소 사회로 가는 대안을 만들어가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탄소중립위원 사퇴에 대한 \*\*\* 위원님의 의사를 묻습니다.

2021년 9월 2일